

보고 기준은 3억원, 공시 기준은 10억원이다

금융회사 안에서 일어난 사고와 그것을 알리고 책임을 묻는 장치를 법령과 공시 자료로 따라간다

은행은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사고가 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예금자에게 알리는 기준은 10억원이다. 사고가 난 날부터 15일 안에 은행 누리집에 올린다.

이 네 숫자는 2016년 6월 28일 시행령에 들어간 뒤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고는 감독당국이 알고 예금자는 모른다. 공시하는 금액은 나중에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 금액을 빼지 않은 값이다.

2024년 1월에 고쳐 그해 7월 3일부터 시행한 지배구조법이 책무구조도를 넣었다. 어떤 일에 사고가 나면 그 일을 맡은 임원이 누구인지 미리 적어 둔다. 한 책무에 임원은 한 사람이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연구소는 책임을 나누는 문서보다 예금자가 무엇을 언제 알 수 있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발행일	자료 기준일	분량
2026년 9월 1일	2026년 8월 31일	PDF 23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확정되지 않은 검사·제재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금융회사 안에서 난 사고를 누가 언제 알게 되고, 누가 책임을 지며, 예금자에게 무엇이 돌아오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보고 기준은 3억원, 공시 기준은 10억원이다. 두 금액과 다음 날 ·15일이라는 두 기한은 2016년 6월 28일 시행령에 들어간 뒤 그대로다. 공시 금액은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 금액을 빼지 않은 값이라 뒤에 크게 바뀐다. 2024년에 고친 지배구조법은 책무를 임원 한 사람에게 적어 두게 했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은 예금보험이 작동하는 두 가지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거래하는 은행 누리집의 공시 게시판에서 사고 공시를 찾아 발견 경위 칸을 읽는다. 사고 공시가 났다고 예금을 옮길 이유는 없다. 내 계좌에서 실제로 돈이 나갔는지 먼저 확인한다. 내 이름으로 새 대출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도 신청할 수 있다.

한눈에

감독당국에 알리는 금액과 예금자에게 알리는 금액이 다르다. 두 금액은 열 해 동안 그대로였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여기서 다루는 것은 **금융회사 안에서 나거나 회사를 겨냥해 들어온 사고**다. 개인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사고는 다루지 않았다.
- 사고 건수와 금액은 감독당국이 국회 의원실에 낸 자료를 언론이 옮긴 값이다. 어느 매체에서 확인했는지 각주에 적었다.
- 모수와 기간이 다른 집계는 섞지 않았다. 전 업권과 4대 은행을 서로 다른 자료로 나누어 적었다.
- 법 조문 번호는 본문에 적지 않고 각주로 내렸다.

차례

2장	3억원은 보고하고 10억원부터 공시한다	6
3장	대책을 낸 다음 해에 더 큰 사고가 났다	9
4장	책무를 임원 한 사람에게 적어 둔다	14
5장	예금보험은 이때 작동하지 않는다	16
6장	무엇을 하면 되는가	18
부록 가	용어 풀이	20
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20

1장

금액이 건수보다 빠르게 늘었다

금융회사 안에서 나는 사고는 얼마나 되는가.

3억원 은행이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사고 금액 기준 2026년 8월 기준 · 은행법 시행령	10억원 은행이 예금자에게 공시해야 하는 사고 금액 기준 같은 시점 · 같은 시행령	4가지 은행법이 사고 예방 대책으로 정한 항목 수 같은 시점 · 은행법
--	--	---

여섯 해 너댓 달 동안 609건이다

2020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전 업권의 금융사고는 609건이다.¹

금액은 1조 2,419억 3,100만원이다.¹

기간이 76개월이므로 한 달에 8건꼴이다. 한 건당 20억 3,900만원꼴이다.²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6건에 172억 4,500만원이다.¹

2025년은 188건에 4,318억 9,700만원이다.¹

건수는 2.5배가 됐고 금액은 25.0배가 됐다.²

여섯 해 너댓 달 동안 609건이다.
한 달에 8건꼴이다. 금액은 1조
2,419억원이다.

금융사고

은행법 시행령은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
금품수수 같은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를 막을 대책을
은행이 세우도록 정한다.

<표 1> 건수는 두 배 남짓 늘었고 금액은 스물다섯 배가 됐다

전 업권 금융사고 연도별 건수와 금액 (2020년 1월~2026년 4월)

연도	건수(건)	금액(억원)	한 건당(억원)
2020	76	172.45	2.27
2021	60	731.93	12.20
2022	61	1,496.92	24.54
2023	62	1,423.20	22.95
2024	112	3,536.71	31.58
2025	188	4,318.97	22.97
2026(1~4월)	50	739.13	14.78
합계	609	12,419.31	20.39

주: 감독당국이 국회 의원실에 낸 자료를 언론 네 곳에서 확인한 값이다. 한 건당 금액은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1,2}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언론 보도에서 옮겨 일부 수정.

금액의 62.0%가 은행에서 났다

같은 기간을 업권별로 나누면 은행이 381건에 7,697억 6,400만원이다.¹

전체 금액의 62.0%다. 건수로는 62.6%다.²

증권은 62건에 2,622억 9,000만원으로 금액의 21.1%다.²

두 업권을 더하면 금액의 83.1%가 된다.²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79건에 205억 6,600만원이다. 둘을 더해도 금액의 1.7%다.²

<표 2> 은행과 증권 두 업권이 금액의 83.1%를 차지한다

업권별 금융사고 누계 (2020년 1월~2026년 4월)

업권	건수(건)	금액(억원)	금액 비중(%)
은행	381	7,697.64	62.0
증권	62	2,622.90	21.1
카드	32	1,080.68	8.7

업권	건수(건)	금액(억원)	금액 비중(%)
저축은행	55	812.43	6.5
손해보험	38	112.55	0.9
생명보험	41	93.11	0.7
합계	609	12,419.31	100.0

주: 비중은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여섯 업권의 건수와 금액을 더하면 총계와 맞는다. 반올림 때문에 비중을 더하면 99.9%다.²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언론 보도에서 옮겨 일부 수정.

가장 큰 유형은 횡령이 아니라 사기다

같은 자료를 유형으로 나누면 금융사기가 253건에 5,052억 8,200만원이다.¹

업무상 배임은 80건에 2,911억 9,300만원이다.¹

횡령과 유용은 208건에 2,051억 9,000만원이다.¹

네 유형의 합은 총계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중을 계산하지 않았다.³

사고 금액과 손실

공시하는 사고 금액은
회사가 입은 피해 금액이다.
나중에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 금액을 빼지 않는다.

4대 은행 열 해 자료에서는 사기가 55.2%다

2017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4대 은행의 사고는 281건에 5,495억 2,800만원이다.⁴

이 자료는 은행별 합과 유형별 합이 모두 총계와 맞는다.⁴

사기가 149건에 3,036억 700만원으로 금액의 55.2%다.⁴

한 건당 19억 5,600만원꼴이다. 2025년 한 해가 열 해 누계 금액의 42.2%다.⁴

외부인이 낀 사고는 2025년 88건이다.⁵

회사 안에서 난 사고와 회사를 겨냥해 들어온 사고가 같은 표에 섞여 있다.

<표 3> 금액의 절반 이상이 사기이고 횡령은 건수 세 건 가운데 한 건꼴이다

4대 은행 금융사고 유형별 누계 (2017년 1월~2026년 7월)

유형	건수(건)	금액(억원)	비중(%)
사기	149	3,036.07	55.2

유형	건수(건)	금액(억원)	비중(%)
업무상 배임	30	1,554.15	28.3
횡령·유용	90	900.76	16.4
도난·피탈	12	4.30	0.1
합계	281	5,495.28	100.0

주: 비중은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보도 한 곳은 사기 비중을 54.2%로 적었고 다른 한 곳은 55.2%로 적었다. 나눗셈 결과를 따랐다.⁴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언론 보도에서 옮겨 일부 수정.

이 보고서가 묻는 것

금액은 늘었고 대책은 여러 번 나왔다. 그런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다시 났다.

누가 언제 알게 되고, 누가 책임을 지며, 예금자에게 무엇이 돌아오는가.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거래하는 은행 누리집에서 금융사고 공시 게시판을 찾아 둔다.

확인하는 곳 · 은행 누리집의 소비자보호 공시 또는 투자정보 게시판

2 공시된 사고의 금액과 손실예상금액을 따로 읽는다.

확인하는 곳 · 공시 파일의 둘째 칸과 셋째 칸. 두 값은 다른 것을 쟀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사고 금액이 곧 예금자의 손실은 아니다. 공시에 적힌 금액은 회사가 입은 피해 금액이다.

2장

3억원은 보고하고 10억원부터 공시한다

사고는 어떤 절차로 밖에 알려지는가.

다음 날

사고가 난 날부터 감독당국에
보고하기까지의 기한

2026년 8월 기준 · 은행법 시행령

15일

사고가 난 날부터 누리집에
공시하기까지의 기한

같은 시점 · 같은 시행령

7 항목

사고 공시 서식에 적게 돼 있는 칸의
수

같은 시점 · 은행 공시 파일

보고와 공시는 다른 절차다

은행법은 2016년 3월 29일에 사고 예방과 보고·공시 의무를 새로 넣었다.⁶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사고가 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⁷

공시는 사고가 난 날부터 15일 안에 은행 누리집에 올린다.⁷

다만 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⁷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고는 감독당국이 알고 예금자는 모른다.

공시

회사가 정해진 내용을
정해진 기간 안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는 것이다.
은행은 자기 누리집에
올린다.

열 해 동안 네 숫자가 그대로다

이 항은 2016년 6월 28일에 신설된 뒤 고쳐지지 않았다.⁷

3억원, 10억원, 다음 날, 15일이라는 네 숫자가 열 해 동안 바뀌지 않았다.⁷

<표 4> 감독당국에 알리는 기준과 예금자에게 알리는 기준이 다르다

은행의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 기준 (2026년 8월 기준)

구분	감독당국에 보고	누리집에 공시
누구에게	금융위원회	누구나 볼 수 있는 곳
금액 기준	3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기한	사고가 난 날의 다음 날까지	사고가 난 날부터 15일 이내
예외	없다	10억원 미만이면 하지 않을 수 있다
금액을 세는 법	사고가 난 때 은행이 입은 피해 금액.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 금액을 빼지 않는다	

주: 두 기준은 2016년 6월 28일 신설된 뒤 고쳐지지 않았다. 이 표는 현행 조문을 정리했다.⁷

자료: 「은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정리.

공시 서식에는 발견 경위 칸이 있다

은행이 올리는 공시 파일에는 일곱 칸이 있다.⁸

사고 금액은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 금액을 빼기 전의 값이다.⁸

사고 금액은 356억원이고 손실예상금액은 0원으로 적혀 있다.⁸

같은 공시의 발견 경위 칸에는 "당행 여신감리 및 외부 회계사 제보"라고 적혀 있다.⁸

다만 발견 경위를 모은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해 자체 적발 비중을 적지 않았다.⁹

<표 5> 공시 서식은 사고 금액과 손실을 따로 적게 돼 있다

은행 금융사고 공시 서식의 기재 항목 (2026년 8월 기준)

칸 이름	무엇을 적나
금융사고 내용	사고의 개요와 유형. 횡령, 사기, 배임 같은 구분
금융사고 금액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 금액을 빼지 않은 금액
손실예상금액	사고 금액에서 되찾을 것으로 보는 금액을 뺀 금액
금융사고 발생일	사고가 일어난 날
발견 경위	어떻게 찾아냈는지. 자체 점검인지 제보인지가 여기 적힌다
사고조치 내용	조사, 고발, 그 밖의 조치와 계획
기타	담보 처분 계획 같은 그 밖의 사항

주: 은행법에 따른 공시라고 적힌 실제 공시 파일에서 항목과 주석을 확인했다. 감독규정 별표의 양식 파일은 확인하지 못했다.⁸

자료: 한 시중은행이 누리집에 올린 금융사고 공시 파일을 정리.

첫 공시 금액은 최종 금액이 아니다

2026년 8월 12일 네 개 은행이 같은 날 신규 공시와 정정 공시를 냈다.¹⁰

네 건을 더하면 490억원이다.¹⁰

한 은행의 공시 금액은 2025년 12월 29억 6,440만원이었다.¹⁰

2026년 6월에 69억 6,890만원, 8월에 173억 4,355만원으로 바뀌었다.¹⁰

여덟 달 사이에 5.9배가 됐다.¹⁰

15일 안에 올리도록 정해 놓았으므로 조사가 끝나기 전 숫자가 먼저 나간다.

첫 공시 금액은 최종 금액이 아니다. 15일 안에 올리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기 전 숫자가 먼저 나간다.

은행 밖 업권은 확인한 것만 적는다

금융감독원 공시 화면에는 보험회사종합공시와 투자매매·중개업자 공시에 금융사고현황 항목이 있다.¹¹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의 경영공시는 정기공시와 분기공시, 결산공시, 감사보고서로 되어 있다.¹¹

이 화면에 금융사고 항목은 없다.¹¹

은행 밖 업권에서 은행법과 같은 공시 의무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¹¹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공시된 사고의 발견 경위 칸을 읽는다.

확인하는 곳 · 은행 공시 파일의 다섯째 칸. 자체 점검인지 외부 제보인지가 적혀 있다

2 같은 사고의 공시가 뒤에 고쳐졌는지 게시판 날짜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같은 게시판의 정정 공시. 제목에 정정이라고 적힌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공시가 없다고 사고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10억원 미만이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3장

대책을 낸 다음 해에 더 큰 사고가 났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는 구조는 무엇인가.

2016년 6월

3억원·10억원 기준이 시행령에 처음
들어간 때

2016년 6월 28일 신설 · 은행법 시행령

2024년 12월

관리의무 위반 제재의 고려요소를
구체화한 지침 시행

2024년 12월 11일 · 금융위원회

2025년 1월

은행·지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이
끝난 날

2025년 1월 2일 · 금융위원회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

2024년 국내 열다섯 개 은행의 사고 금액은 1,877억 900만원이다.¹²

같은 해에 되찾은 금액은 134억 4,700만원이다. 회수율은 7.2%다.¹²

손실은 회사가 지고 되찾는 뭇은
열에 하나다. 2024년 열다섯 개
은행의 회수율은 7.2%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을 더하면 평균 회수율은 9.9%다.¹²

같은 열다섯 개 은행의 사고 금액은 2020년 68억 5,200만원에서 2024년 27.4배가 됐다.¹²

보험으로 메워지는 몫도 한도에 걸린다

한 시중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614억 5,000만원 규모의 횡령이 있었다.¹³

보험사는 사고당 한도 20억원을 들었다. 1심 법원은 세 차례를 각각 다른 사고로 보아 50억원을 인정했다.¹³

사고 금액의 8.1%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¹³

되찾지 못하고 보험으로도 메우지 못한 금액은 회사의 자본에서 줄어든다.

규칙이 이 행동을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이 세울 사고 예방 대책의 항목을 정해 두었다.¹⁴

첫째 항목이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를 막을 대책이다.¹⁴

둘째 항목은 과거에 있었던 사고나 그와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이다.¹⁴

규정이 스스로 재발을 앞에 두고 쓰여 있다.

새 책임 규칙은 책임을 묻지 않는 기간을 두고 들어왔다.¹⁵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1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냈다.¹⁵

기간은 낸 날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다.¹⁵

이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¹⁵

스스로 찾아내 고치면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도 함께 있다.¹⁵

같은 방식이 2025년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로 이어졌다. 그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낼 67개사 가운데 53개사가 참여했다.¹⁶

2026년 1월에는 자산이 큰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으로 이어졌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장과 자체 적발·시정하면 감경한다는 문장이 그대로 다시 쓰였다.¹⁶

회수율

사고로 나간 금액 가운데 회사가 되찾은 금액의 비율이다. 되찾지 못한 금액은 회사의 자본에서 줄어든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같은 방식이 세 업권에서 되풀이됐다.

법을 안에도 감면 통로가 있다

지배구조법은 관리의무를 어긴 임원을 제재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하게 한다.¹⁷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와 정도, 그 결과가 하나다.¹⁷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수행했는지가 다른 하나다.¹⁷

이 두 가지를 고려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¹⁷

임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에도 같은 단서가 붙어 있다.¹⁷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11일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했다.¹⁸

여기서 '중대한 손실'의 뜻을 검사·제재 규정의 기관경고 사유에 맞먹는 사고 규모로 예시했다.¹⁸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7월 한 시중은행 직원이 여러 해에 걸쳐 700억원대를 횡령한 일이 알려졌다.¹⁹

그 직원이 13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사실을 회사가 몰랐다는 내용이 함께 나왔다.¹⁹

직인과 공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¹⁹

2022년 11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²⁰

2023년 9월 감독당국은 한 지방은행 직원의 2,988억원 횡령 검사결과를 냈다.²¹

혁신방안을 낸 다음 해에 더 큰 금액의 사고가 드러났다.

4대 은행 준법감시 인력은 2023년 말 596명에서 2024년 말 712명이 됐다.²²

한 해에 116명 늘었다. 그 전해 증가폭은 65명이다.²²

인력을 늘린 다음 해인 2025년에 건수와 금액이 2020년 이후 가장 컸다.¹

<표 6> 대책과 사고가 번갈아 이어졌다

금융사고 관련 제도와 주요 사고의 시점 (2016년~2027년)

시점	무슨 일이 있었나	자료 등급
2016.06.28	시행령에 3억원·10억원 기준이 처음 들어갔다	법령 원문

시점	무슨 일이 있었나	자료 등급
2022.07	한 시중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이 알려졌다	언론 보도 네 곳
2022.11	감독당국과 은행권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전재본
2023.09	한 지방은행의 2,988억원 횡령 검사결과가 나왔다	전재본
2024.01.02	지배구조법에 책무구조도와 관리의무 조항이 신설됐다(시행 2024.7.3)	법령 원문
2024.07.11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과 제재 운영지침안이 나왔다	발표 기관 원문
2024.12.11	제재 운영지침이 시행됐다	발표 기관 원문
2025.01.02	은행·지주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자 시범운영 종료일	발표 기관 원문
2025	전 업권 사고가 188건 4,318억 9,700만원으로 2020년 이후 가장 컸다	언론 보도 네 곳
2027.07.02	모든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출이 끝나는 날	발표 기관 원문

주: 1) 2022년 11월 혁신방안의 날짜는 전재본이 11월 3일, 한 법률사무소 자료가 11월 4일로 적었다. 두 날짜가 어긋난다.²⁰

2) 2023년 9월 검사결과는 제목과 발표일, 금액까지 확인했다. 본문의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다.²¹

자료: 법령 원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언론 보도를 시점 순으로 정리.

장치가 어디서 멈췄는가

2022년 혁신방안은 내부통제 장치 여럿을 함께 다뤘다.²³

명령휴가와 직무분리는 대상자를 넓히고 관리 체계를 갖추며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²³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도록 했다.²³

준법감시 인력은 임직원의 0.8% 이상이면서 15명 이상으로 정했다.²³

전산에서는 접근통제를 높이고 자금인출 단계마다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²³

이 장치들은 법령이 아니라 대책 문서에 들어 있다.²³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내부통제기준에 담게 한 열세 가지 사항에는 명령휴가와 직무분리가 없다.²³

감독당국이 2026년에 지적한 대목

2026년 6월 감독당국은 경영관리를 맡은 임원에게 책무가 몰린 사례를 지적했다.²⁴

금융영업 관련 책무가 겹치거나 빠진 사례, 기재가 모자란 사례도 함께 들었다.²⁴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을 겸한 사례도 지적 대상이었다.²⁴

같은 달 은행권 워크숍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의 독립성 검증이 모자란 사례를 지적했다.²⁴

대표이사 승계 절차를 현 대표이사에게 유리하게 바꾼 사례도 들었다.²⁴

보수위원회 임원이 자기 보수 결정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²⁴

이사회 운영이 수동적이고 형식에 그쳐 경영진 견제가 모자라다는 지적도 나왔다.²⁴

책무를 적은 문서와 그 문서를 의결하는 회의가 같은 자리에서 지적됐다.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2026년 8월 31일 현재 보고 기준은 3억원, 공시 기준은 10억원이다.⁷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은 은행·지주에서 시작해 금융투자·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으로 이어졌다.¹⁶

나머지 회사의 제출은 2027년 7월 2일까지다.²⁵

제재 운영지침은 시행됐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7,18}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사고가 일어난 날과 공시가 게시판에 올라온 날을 건준다.

확인하는 곳 · 공시 파일의 발생일 칸과 게시판의 등록 날짜. 두 날짜의 사이가 사고를 찾아낸 시점을 말해 준다

2 같은 유형의 사고가 그 회사에서 다시 났는지 게시판을 거슬러 본다.

확인하는 곳 · 같은 게시판의 지난 공시 목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사고가 났다고 그 회사의 예금이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다.
손실을 지는 쪽은 회사다.

4장

책무를 임원 한 사람에게 적어 둔다

사고가 나면 누가 무엇을 책임지게 돼 있는가.

1명 한 책무를 맡는 임원의 수. 없어도 안 되고 둘 이상이어도 안 된다 2026년 8월 기준 · 지배구조법	8가지 대표이사등이 해야 하는 총괄 관리조치의 수 같은 시점 · 같은 법률	2027년 7월 모든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출이 끝나는 시점 2024년 6월 11일 · 금융위원회
---	---	---

임원이 해야 하는 점검과 조치

지배구조법에 임원의 관리의무 조항이 2024년 1월 2일 새로 들어갔고 그해 7월 3일 시행됐다.²⁶

임원은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실제로 집행되고 운영되는지 점검한다.²⁶

임직원이 법령과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어긋난 것을 찾으면 고치는 조치를 한다.²⁶

한 책무에 임원은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사고가 나기
전에 문서에 적어 둔다.

책무구조도

임원 각자가 어떤 일을
책임지는지 미리 적어 둔
문서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낸다.

책무는 한 사람에게만 준다

대표이사등은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나눈 문서를 마련한다.²⁷

조건은 두 가지다. 책무마다 맡는 임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둘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²⁷

대표이사에게는 여덟 가지 총괄 관리조치가 따로 있다.²⁸

그 가운데 하나가 제보와 신고, 보고를 받는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다.²⁸

잠재적 위험요인과 취약분야를 점검하는 것도 들어 있다.²⁸

위반이 오래 이어지거나 되풀이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널리 이뤄지는 것을 막는 조치도 있다.²⁸

2022년과 2023년에 드러난 사고의 모양이 이 조항에 그대로 적혀 있다.

<표 7> 책무구조도는 사고가 나기 전에 이름을 정해 두는 문서다

지배구조법이 정한 관리의무와 제재의 구조 (2026년 8월 기준)

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돼 있나	지키지 못하면
임원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집행·준수를 점검하고 고칠 것을 조치한다	해임요구부터 주의까지 다섯 단계
대표이사등	여덟 가지 총괄 관리조치를 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같은 다섯 단계
이사회	책무구조도를 의결하고 대표이사의 보고를 받는다	—
모든 책무	말는 임원이 반드시 있고, 둘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회가 고쳐 내라고 요구한다

주: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수행했으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¹⁷

자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을 정리.

언제부터 누가 내는가

금융위원회 자료는 제출 시기를 네 단계로 나눠 놓았다.²⁵

은행과 금융지주는 2025년 1월 2일까지 낸다.²⁵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2025년 7월 2일까지다.²⁵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다.²⁵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천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도 같은 날까지다.²⁵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낸다.²⁵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4일 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밝혔다.²⁵

임원에게 무엇을 묻는가

임원에 대한 조치는 다섯 단계다.²⁹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다.²⁹

이 조항을 적용해 임원을 제재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없다고 적지는 않는다.²⁹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거래하는 회사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서 이사회 구성을 본다.

확인하는 곳 · 회사 누리집의 지배구조 공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같은 사람인지 본다

2 사고 공시의 조치 내용 칸에 고발과 재발 방지책이 적혔는지 읽는다.

확인하는 곳 · 공시 파일의 여섯째 칸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책무구조도 자체는 공개 문서가 아니다. 개인이 열람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5장

예금보험은 이때 작동하지 않는다

사고가 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가.

2가지 예금보험이 작동하는 상황의 수 2026년 8월 기준 · 예금자보호법	1억원 한 사람이 한 금융회사에서 돌려받는 한도 2025년 9월 1일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50억원 이 금액 이상 이득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026년 8월 기준 · 특정경제범죄법
--	--	---

예금보험이 나서는 상황은 둘뿐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이 작동하는 상황을 두 가지로만 정한다. 하나는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을 멈춘 경우다. 다른 하나는 인가나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을 결의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다. 한도는 1억원이다. 임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은 이 두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³⁰ 대신 회사가 예금을 그대로 돌려줄 의무를 진다.

임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은
예금보험이 작동하는 두 가지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다.

보험사고

예금보험이 작동하는 상황을
법이 부르는 이름이다.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났다는
뜻이 아니다.

내 계좌에서 나간 돈은 회사가 물어낸다

대법원은 1975년 5월 27일 이 문제를 판단했다. 은행 직원의 과실로 권한 없는 사람에게 예금을 내주면 그 지급은 예금주에게 효력이 없다. 약관의 면책 조항도 통상의 주의로 가릴 수 있었던 경우까지 덮지는 못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예금주 쪽 직원의 과실도 보아, 예금주가 은행이 입은 손해의 절반을 물어 주게 했다.³¹

다만 최근 사고의 다수는 회사 돈이 나간 사고다

1장에서 본 4대 은행 자료에서 가장 큰 유형은 사기였다. 금액의 55.2%다.⁴ 외부인이 낀 사고는 2025년 88건이다.⁵ 이 유형은 개인의 예금이 아니라 회사의 대출금이 나가는 사고다. 예금자의 잔액은 그대로 남는다.

공시로는 고객이 돌려받았는지 알 수 없다

공시 서식의 손실예상금액은 회사의 손실을 적는 칸이다. 고객이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를 적는 칸은 서식에 없다.⁸ 2026년 8월에 나온 네 건은 손실예상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적혀 있다. 개별 사고에서 고객이 돈을 돌려받았는지는 공시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¹⁰

돈을 빼돌린 사람에게 무엇이 적용되나

횡령과 배임,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따로 처벌한다.³²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내 계좌에서 실제로 돈이 나갔는지 거래내역으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하는 은행의 앱이나 창구에서 뽑는 거래내역서

2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한다.

확인하는 곳 · 회사의 민원 창구. 접수 번호를 받아 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일은 아니다. 예금보험은 지급정지와 인가취소·해산·파산일 때 작동한다.

무엇을 하면 되는가

오늘 할 수 있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89,817명 여신거래 안심차단 이용자. 2024년 9월 26일 기준 2024년 9월 30일 · 금융위원회	15일 사고가 난 날부터 공시가 올라오기까지의 기간 2026년 8월 기준 · 은행법 시행령	1억원 회사가 문을 닫을 때 한 사람이 돌려받는 한도 2025년 9월 1일 시행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	--

국민이 할 일

거래하는 은행 누리집에서 금융사고 공시 게시판을 찾아 즐겨찾기에 넣는다. 공시를 열면 사고 금액과 손실예상금액을 따로 읽고, 발견 경위 칸을 확인한다. 같은 사고의 정정 공시가 뒤에 올라오는지도 본다. 사고 공시가 났다고 예금을 옮길 이유는 없다. 내 계좌에서 실제로 돈이 나갔는지 거래내역으로 먼저 확인한다. 내 이름으로 새 대출이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면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한다. 이 제도는 2024년 8월 23일 시작했고 한 달여 만에 89,817명이 가입했다.³³

**사고 공시가 났다고 예금을 옮길
이유는 없다. 내 계좌에서
실제로 돈이 나갔는지 먼저
확인한다.**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공시의 발견 경위 칸을 자체 점검과 외부 제보로 나누어 적고 그 구분을 해마다 모아 낸다. 둘째, 사고 금액이 뒤에 바뀌면 처음 공시와 바뀐 공시를 한 화면에서 나란히 보이게 한다. 셋째, 명령휴가와 직무분리를 실제로 몇 명에게 적용했는지 지배구조 공시에 숫자로 적는다.^{8,23}

당국이 할 일

첫째,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을 정기 공표 자료로 낸다. 둘째, 3억원과 10억원이라는 두 기준을 열 해 만에 다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밝힌다. 셋째, 발견 경위를 모은 통계를 업권별로 낸다. 자체 적발과 외부 적발의 비중은 지금 어느 화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1,7,9}

<표 8> 사고 공시와 계좌 상태는 서로 다른 화면에서 본다

확인하는 곳과 확인되는 내용 (2026년 8월 기준)

무엇을	어디서	무엇이 나오나
은행 사고 공시	은행 누리집의 소비자보호 공시 또는 투자정보 게시판	사고 금액, 손실예상금액, 발견 경위
보험회사 사고 현황	금융감독원 업무자료의 보험회사종합공시	금융사고현황 항목
증권회사 사고 현황	금융감독원 업무자료의 투자매매·중개업자 공시	금융사고현황 항목
저축은행 경영공시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의 경영공시	정기공시·분기공시·결산공시· 감사보고서
임직원 위법행위 제보	금융위원회 누리집의 신고마당 금융사고제보	횡령·배임·금품수수 등의 접수 창구
대출 사전 차단	거래하는 금융회사 창구나 앱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내 이름으로 새 대출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주: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공시에 금융사고 항목은 없다. 보험회사종합공시는 항목이 있는 것까지 확인했고 게시물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다.¹¹

자료: 각 기관 누리집 화면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거래하는 은행의 사고 공시 게시판을 열어 최근 1년 목록을 본다.

확인하는 곳 · 은행 누리집의 공시 게시판. 사고 금액과 발견 경위를 읽는다

2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할지 정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하는 금융회사 창구나 앱. 대출이 필요할 때 해제한다

3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접수 창구에 낸다.

확인하는 곳 · 금융위원회 신고마당의 금융사고제보 화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사고 공시를 이유로 예금을 옮기거나 해지할 일은 아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보고 기준 3억원과 공시 기준 10억원을 고칠지다. 둘은 관리의무를 어긴 임원에게 어떤 제재가 내려지는지다. 셋은 은행 밖 업권의 공시를 어디까지 넓힐지다. 하나와 셋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예고에서 알 수 있다. 연구소는 책임을 나누는 문서가 늘어난 만큼 예금자가 볼 화면도 넓어져야 한다고 본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금융사고 금액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입은 피해 금액이다. 나중에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 금액을 빼지 않는다.

손실예상금액

사고 금액에서 되찾을 것으로 보는 금액을 뺀 값이다. 회사의 손실이지 고객의 손실이 아니다.

책무구조도

임원 각자가 어떤 일을 책임지는지 미리 적어 둔 문서다. 한 책무에는 임원 한 사람만 적는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2026년 8월 31일에 확인했다.

- [1차]** 「은행법」 제3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조문. 현행 조문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은행법&joNo=003403>) · 확인 2026.08.31
- [1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0조의3·제30조의4·제35조·제35조의2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joNo=003003>) · 확인 2026.08.31
- [1차]** 「예금자보호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 보험사고의 정의와 지급한도 1억원.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예금자보호법&joNo=000200>) · 확인 2026.08.31
- [1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mode=11&lsNm=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joNo=000300>) · 확인 2026.08.31
- [1차]** 대법원 1975년 5월 27일 선고 74다2083.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화면 law.go.kr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2586>) · 확인 2026.08.31
- [1차]** 한 시중은행이 누리집에 올린 금융사고 공시 첨부 파일. 서식 일곱 항목과 기재 내용 wooribank.com (https://spot.wooribank.com/pot/bbs?cmd=download&BOARD_ID=B00058&ARTICLE_ID=32369&ATTACH_ID=53028) · 확인 2026.08.31
- [1차]** 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 관련 자료 일곱 건(2024.2.13, 2024.6.11 보도참고, 2024.7.11, 2024.11.4, 2025.1.15, 2025.4.14, 2026.1.14) fsc.go.kr (<https://www.fsc.go.kr/no010101/81701>) · 확인 2026.08.31
- [1차]** 금융위원회 2024.12.11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시행 fsc.go.kr (<https://www.fsc.go.kr/no010101/83583>) · 확인 2026.08.31

9. **[1차]** 금융위원회 2024.9.30 여신거래 안심차단 이용자 수 보도자료 fsc.go.kr
(<https://www.fsc.go.kr/no010101/83151>), 금융사고제보 화면 fsc.go.kr
(<https://www.fsc.go.kr/pa030501>) · 확인 2026.08.31
10. **[1차]**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금융사고현황 목록 화면 fss.or.kr
(<https://www.fss.or.kr/fss/bbs/B0000105/list.do?menuNo=200417>),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경영공시 fsb.or.kr (https://www.fsb.or.kr/busmagefina_0100.act)
· 확인 2026.08.31
11. **[2차]** 금융감독원 2022.11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2023.1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2023.9.20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 KDI
경제정보센터 전자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1766>) · 확인 2026.08.31
12. **[2차]** 김·장,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과제별 정리 kimchang.com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6239)
· 확인 2026.08.31

각주

1.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에 낸 자료다. 파이낸셜뉴스·일간NTN·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투데이 네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기준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다.
2.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12,419.31 \div 609 = 20.377$ 억. $609 \div 76 = 7.99$ 개월 = 8.0건. $4,318.97 \div 172.45 = 25.04$ 배. $7,697.64 \div 12,419.31 = 62.0\%$.
3. 네 유형의 합은 555건에 1조 27억 1,500만원으로 총계와 54건, 2,392억 1,600만원 차이가 난다. 보도가 옮긴 표에 나머지 항목이 없어 비중을 계산하지 않았다.
4. 4대 은행 자료다. 뉴스페이스·이경제·위드뉴스 세 곳에서 확인했다. 비중은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3,036.07 \div 5,495.28 = 55.2\%$. $5,495.28 \div 281 = 19.56$ 억 5,600만원.
5. 뉴스페이스 2026년 8월 20일과 전자신문 보도 두 곳에서 88건을 확인했다. 늘기 전 기준을 뉴스페이스는 2024년 16건, 전자신문은 2023년 6건으로 적었다.
6. 「은행법」 제34조의3이다.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16.3.29]로 적혀 있고, 제1항은 2017년 4월 18일에 고쳤다.
7.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이다. 조문 끝은 [본조신설 2016.6.28]이고 이 항에는 개정 표시가 없다. 같은 조 제3항은 2021년 3월 23일에 고쳤다.
8. 한 시중은행이 올린 공시 파일이다.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에 따른 공시라고 적혀 있고 일곱 칸과 주 1)~주 4)가 있다. 사고 금액 35,600,000천원, 손실예상금액 0원이다. 감독규정 별표의 양식 파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9. 발견 경위를 모아 집계한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찾아본 범위는 감독당국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록, 국회 의원실 배포 자료 다섯 건이다.
10. 머니투데이·파이낸셜뉴스 2026년 8월 12일 보도다. 네 건 합계 490억원이다. $173.4355 \div 29.6440 = 5.85$ 배로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11. 네 화면에서 항목 구성을 확인했다. 보험회사종합공시와 투자매매·중개업자 공시의 게시물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은행법에 해당하는 다른 업권의 공시 조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12. 열다섯 개 은행 자료다. 한국세정신문·아시아경제·민주신문 세 곳에서 확인했다. 2021년 회수율을 한 매체는 55%, 다른 매체는 55.5%로 적었다. $1,877.09 \div 68.52 = 27.4$ 배다.
13. 이투데이 2026년 7월 9일 보도 한 곳이다. $50 \div 614.5 = 8.1\%$ 다. 1심 판결이고 확정되지 않았다.
14.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2호다.
15. 금융위원회 2024년 7월 11일 보도자료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16. 금융위원회 2025년 4월 14일 보도자료다. 2025년 7월 제출대상 67개사 중 53개사로 적혀 있다. 2026년 1월 14일 보도자료에 같은 감면 문구가 그대로 있다.
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2항과 제35조 제5항 단서다.
18. 금융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보도자료다. 발표일과 시행일이 같다.
19. 뉴시스·머니투데이·한국경제·아주경제 2022년 7월 26일 보도 네 곳에서 확인했다.

20.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은 2022년 11월 3일로, 한 법률사무소 자료는 11월 4일로 적었다.
21.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에서 제목과 발표일, 2,988억원을 확인했다. 검사결과 본문의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22. 아시아투데이 2025년 3월 24일 보도 한 곳이다. 회사별 비율은 적지 않았다.
23. 과제별 내용은 김·장 정리에 따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열세 개 호에 명령휴가와 직무분리라는 낱말이 없다.
24. 2026년 6월 21일 사전 컨설팅 결과는 디지털타임스·청년일보 두 곳, 6월 29일 은행권 워크숍 지적은 아주경제 한 곳 보도에 따른다.
25. 금융위원회 2024년 6월 11일 보도참고자료와 2025년 1월 15일 보도자료다. 지배구조법 시행일은 2024년 7월 3일이다. 2024년 11월 4일 18개사는 같은 기관 보도자료에서 확인했다.
2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각 호와 제2항이다.
27. 같은 법 제30조의3 제1항부터 제5항까지다. 제2항 제1호와 제2호가 한 책무에 임원 한 사람을 정한다.
28. 같은 법 제30조의4 제1항 각 호다. 제3호, 제5호, 제6호를 본문에 옮겼다.
29. 같은 법 제35조 제1항과 제35조의2 제1항이다. 제35조의2를 적용한 임원 제재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30.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와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다. 시행령은 시행 2025년 9월 1일이다.
31. 대법원 1975년 5월 27일 선고 74다2083 판결이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확인했다.
3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다.
33. 금융위원회 2024년 9월 30일 보도자료다. 89,817명은 2024년 9월 26일 기준이고 시행일은 2024년 8월 23일이다.



제목	보고 기준은 3억원, 공시 기준은 10억원이다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78 · NEXUS Research 2026_78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9월 1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보고 기준은 3억원, 공시 기준은 10억원이다」, 넥서스 리서치 2026_78, 2026.
수정 이력	없음
누리집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확정되지 않은 검사·제재 결과나 특정 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개별 사안의 판단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